

# SmartWhistle

##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12월호

### 1. 최근 동향 및 소식

- '자금세탁방지' 과태료 등 금전제재 상향 조정...본점 내부통제 책임도 높인다
- “권익위서 행정심판 기능 분리 추진”
-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 최흥식 "외국계 금융사, 상시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구축해야"

###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한국철도공사]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 3. 청렴 위반 사례

- 퇴직 공무원 모임의 현장견학 지원
- 납품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개 행위

### 4. 지식마당

- 내부통제 제도의 효과 및 방향

### 5. Quiz

###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 최근 동향 및 소식

### 1. '자금세탁방지' 과태료 등 금전제재 상향 조정...본점 내부통제 책임도 높인다

국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국제기준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의무나 과태료 상향과 같은 금전 제재와 내부통제 책임 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은 은행연합회에 서 열린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각 국의 제재도 점차 엄정해지는 추세"라며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발맞추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경우 자국 소재 금융회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 법인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AML 제재 관련 과태료를 법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해 나 서기로 했다. 또한 은행 해외점포들이 감독강화 방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해외점 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 검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AML 제도 준수를 강화하고 해외 점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등 내부통제 강화 정책방안 등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령 및 규정안이 예고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676061/?sc=naver>

### 2. “권익위서 행정심판 기능 분리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세 기능이 합쳐져 만들어졌는데, 행정심판 기능을 떼어내고 고충처리와 반부패·청렴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익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을 강화하는 게 새 정부 기조이며, 권익위에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를 재설계하는 쪽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를 공직부패로 좁게 정의하는데, 세계적 추세는 민간부패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요구도 있다”며 “이런 기조에서 본다면 행정심판 기능은 권익위와 함께하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론에 밀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여론수렴을 했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도 들어있다”며 “후퇴했다고 읽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20012012&wlog\\_tag3=naver](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20012012&wlog_tag3=naver)

## 최근 동향 및 소식

### 3.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의 경우는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이 포함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식사비)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409271](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409271)

### 4. 최홍식 "외국계 금융사, 상시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구축해야"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상시적 내부통제 장치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외국계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규제 완화 등 외국계 금융사에게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가 지나친 경쟁에 치우칠 경우 금융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한 외국계 금융사가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선진 금융기법을 우리 금융시스템에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 금융시장을 잘 알고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당국의 다방면의 노력을 충분히 공감하고 경쟁과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309453428838>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한국철도공사]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한국철도공사는 ‘국민행복 코레일’이라는 비전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앞장서서 사업 다각화와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송 및 수송 사업을 통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역세권, 역사 등의 사업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KORAIL WAY 창조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가능경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문화홍보처를 핵심 주관부서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10개의 분과를 배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 1. 윤리경영

#####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한국철도공사는 경영진과 전 직원의 강력한 윤리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공감과 참여의 윤리경영 활동을 통하여 반부패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KORAIL WAY 창조’를 전략 목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주요한 전략을 수립 및 이행함으로써 성과관리와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

윤리경영 고도화를 통하여 국민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통하여 매년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개선사항 및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2015년 조직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한 업무지시 및 연고 관계 업무처리</li> <li>부패관련자가 간부이면 부패금액이 큼</li> <li>폐쇄적 업무처리절차, 직원 불친절</li> </ul>
2016년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분야 진단 및 해소를 위한 개선 활동</li> <li>간부 특화 교육프로그램 등 예방적 활동 강화</li> <li>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선제적 근절활동</li> </ul>

<조직진단 및 추진방향>

2015년에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폐쇄적 업무처리 절차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확인되어, 2016년의 개선방안으로 예방적 윤리활동 강화와 부패유발요인의 선제적인 근절활동을 실행하였다.

##### 윤리경영 활동 및 성과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실천 방안의 공유 및 전파를 위하여 교육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6년에는 윤리교육을 통하여 청렴 전문가 48명을 배출하였으며, 간부에 대한 청렴도 교육을 통하여 전 간부 507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In-Joy’ 청렴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청렴콘서트와 콘텐츠 공모,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청렴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내부건제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IT, 회계에 인적 역량을 투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 전문성 지수가 전년 대비 1.05% 향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당회유와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강요와 집단 따돌림 예방에 일조하였고, 신고 접수 즉시 감사실에서 파견 및 조사를 실행하여 부당강요 급감의 결과를 이루어냈다.

#### 2. 인간 존중 경영

##### 임직원 권익보호

2007년 5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 권보호, 노동기준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며,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였으며, ISO26000의 7대 원칙과 관련한 법령 및 정부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UN 인권이사회를 통하여 ‘인권과 다국적기업 실무 그룹’ 방한 경영진 면담에 참여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실제적 영향에 대하여 점검하고 임직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윤리경영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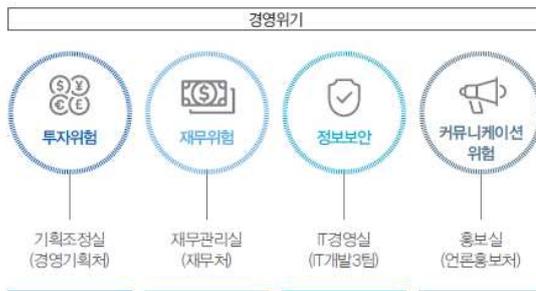
### 존중의 노사문화

2017년을 기준으로 4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직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조합 운영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절차에 의한 노조와의 갈등에서도 의견청취 후 의결하였으며, 파업에 따른 갈등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에게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상생하고 존중하는 노사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3.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유형별 전담 부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 재무위험, 재난위험, 고객의 니즈에 따른 시설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보안에 이르기까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전사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를 경영위기와 재난위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는 투자 위험, 재무위험, 정보보안, 커뮤니케이션 위험으로, 재난위기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철도테러 위험으로 분류하고 본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리스크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험 별 전담부서>

####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비상대책기구

재난위기를 대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금융위험에 따른 대응과 자금운영의 수익성 및 안전성 향

상을 주요 경영안건으로 채택하여 위험관리체계를 보완하여 부채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심의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상환으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 4. 동반성장

#### 동반성장 추진 체계

철도산업의 발전과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며,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업체와 기술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동반성장을 구현해왔다. 또한 전사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구축과 동반성장 추진 실행력 강화, 동반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추진 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팀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였으며, 성과공유제를 내부경영평가 본 지표로 격상시켜 새로운 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하였다. 더불어 동반성장 핵심인재 양성과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통해 총 29건의 대내외 포상을 진행하였다. 특히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채널인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신설하여 2016년 2,226건의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 동반성장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약

공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협력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세종시, 대관령 하늘목장과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총 25개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발전,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여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철도공사, 2016 KORAIL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6

## 청렴 위반 사례

### 1 퇴직 공무원 모임의 현장견학 지원

□□기초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 등은 농업 관련 기관의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농업발전연구회’에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해당 연구회 회원의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함

시사점 :

- ① 별도의 근거가 되는 규정 없이 퇴직 공무원 모임을 지원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임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2 납품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개 행위

☆☆기초자치단체 A 부군수는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인조잔디 납품업자로부터 군 공설운동장에 자기 회사의 인조잔디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군청 담당과장을 부군수 실로 호출하여, 위 잔디납품업자를 담당과장에게 소개 시켜주면서 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여 도와주라고 말함

시사점 :

- ① A 부군수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지식마당

### 내부통제제도의 효과 및 방향

#### 1. 개요

내부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여러 통제활동을 말한다. 특히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여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여러 통제절차를 말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의 목적 중 재무보고 목적과 관련한 것으로서, “회계정보의 기록·유지·관리 및 공시와 관련된 회계와 결산 프로세스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전담 통제조직과 통제절차를 사내에 구축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기업들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하지만, 2002년 이전까지는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의 여부가 기업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제도가 특히 중요시되게 된 것은 2000년과 2001년 들어 Waste Management, Worldcom, Enron 등 여러 회계부정 사건 중, 특히 Enron 사건으로 당시 미국 최대의 회계법인이었던 Arthur Anderson이 감사실패의 결과로 법원에 기소된 후 해체될 정도의 위기를 맞이하고부터였다.

경영진의 책임회피와 다른 부정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미국 의회는 Sarbanes-Oxley Act(SOX)를 통과시켰다. 그 대표적인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조항은 아래 내용과 같다.

구분	내용
SOX 30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지며, 내부통제제도에 취약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공시할 것</li> </ul>
SOX 40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은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제도에 취약점이 있다면 이를 별도의 감사의견으로 발표할 것</li> </ul>

<내부통제제도 관련 SOX 규정>

#### 2. 미국 내부통제제도 도입과 흐름

1970년대 미국에서는 해외에서의 뇌물제공과 관련된 여러 스캔들이 벌어졌다. Lockheed 사건과 더불어 Bananagate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공정한 거래환경과 기업의 정직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유지를 의무화하여 공식적으로 처음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래 표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최초 언급부터 현재의 내부통제제도가 있기까지의 주요 사건과 흐름에 대한 내용이다.

시 기	특 징
197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부패방지법 제정(1977)</li> <li>-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유지의 의무화</li> </ul>
198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 설립</li> </ul>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SO Framework(내부통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한 통합적인 기본틀)를 발표</li> </ul>
2000년 ~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nron 회계 부정사건 발생</li> </ul>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arbanes-Oxley Act 제정</li> </ul>

#### <미국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2002년 제정된 Sarbanes-Oxley Act에 따라 미국에서 기업이나 회계감사인이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에 대해 발표한 자료가 2005년부터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당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기 시작했다.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중요성의 증대 및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심 또한 이때부터 크게 증가한 것이다.

## 지식마당

### 3. 한국 내부통제제도 도입과 흐름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00년 초 회계개혁 법안을 도입하였다. 그러던 중 2002년 미국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포함한 Sarbanes-Oxley Act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2005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및 평가함에 있어 모범규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제정하였다. 아래 표는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도입부터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 적용되기까지의 내용이며, 미국의 Sarbanes-Oxley Act 제정 이후 그 영향을 받아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기	특 징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개혁법안 도입</li> </ul>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시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기록의 작성, 보관 및 결산관련 통제 구축,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및 조직 의무화</li> </ul> </li> </ul>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Sarbanes-Oxley Act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규정 강화</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제정</li> </ul>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 지침을 제정</li> </ul>

<한국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 4. 내부통제제도의 효과 및 방향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도입부터 SOX의 규정에 대한 효과로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내부통제제도가 유용하다고 지지하고 있으나, 내부통제제도 강화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SOX Section 404조가 비용이 많이 들면서 효익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 당시와 다르게 소규모기업들에 대해서는 Section 404의 적용이 면제되는 등의 수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구 분	적 용 대 상	
	시가총액 \$75백만 이상기업	기타기업
SOX 302조	0	0
SOX 404조	0	X

반면에 부채의 자본비용에 대해 효과적인 내부통제 제도가 부채의 자본비용을 낮춘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일반적이며, Section 404 도입 이후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감소했음은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재무보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에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한 이후에 회계 오류 발생 빈도와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들은 제도의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제도 강화의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투자자의 보호수준이 낮고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비용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Section 404와 유사한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효과가 보다 클 수 있어 규정은 단순한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준일 외(2016),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미래 연구방향의 제언”.

## Quiz

1. 다음 중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내부통제의 효과성 주장은 회계감사인의 역할이다
  - ②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여러 통제활동들을 말한다
  - ③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여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④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전담 통제조직과 통제절차를 사내에 구축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2. 다음 중 내부통제제도가 있기까지의 주요 사건과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1977년 - 반부패방지법 제정
  - ② 1985년 - COSO 프레임워크 발표
  - ③ 2000년 - ENRON 회계부정사건 발생
  - ④ 2002년 - SOX법 제정
  
3. 다음 중 우리나라 내부통제 도입부터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적용까지의 내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2000년 - 회계개혁법안 도입
  - ② 2001년 -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한시적 적용
  - ③ 2002년 - 국내 내부회계관리법 제정
  - ④ 2006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 지침 제정
  
4. 내부통제제도 제정 이후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내부통제제도 강화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 ② 소규모기업들에 대해서는 Section 404의 적용이 면제되는 등의 수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 ③ 국내에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한 이후에 회계 오류 발생 빈도와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잇따른다.
  - ④ 내부통제제도 강화의 비용이 효익 보다 크다.

##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③ 정부간섭이 일부 필요하다고 믿었다.
2. 답 ④ 엔론사태가 발생하였다.
3. 답 ① 정부관료들의 민간부분의 자율적 기능 침해가 문제가 되었다.
4. 답 ②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 관련 행사

### 1. 권익위, 15일까지 ‘반부패 주간’ ... 청렴 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 (12월 9일)을 맞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반부패 주간’으로 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부패 주간을 계기로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성과를 대내외에 알려서 일반 국민이 ‘청렴’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816363407094>

### 2. 철도시설공단, 반부패시책 우수 기관 선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은 건설 분야 부패예방을 통한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부패행위자·부패행위 유발업체의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의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시공사·감리사 등의 직무관련자를 추가해 민간 청탁을 차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4000256>

### 3. 농어촌공사, ‘2017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대회’ 내부감사혁신 최우수 수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17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부정위험 진단을 통한 잠재된 부패·방만 요인 점검과 개선 ▲감사의 사각지대였던 단위 업무에 대한 집중감사 ▲감사체계 개편 및 부패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감사활동을 전개했다.